


전국1타 종로메가랜드 ☎ 02) 2135-1806	전원합격!! 이론요약과정	담당: 김상진 
	2021년 03월~04월(7주차) 핵심내용 및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제2편] 부동산거래신고법령 제3장 외국인특례

외국인 특례	① 외국인이 계약(매매계약 제외)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내의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시 : 계약 일로부터 (60일/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하여야 한다. 위반시 (300 만원/ 100만원) 이하 과태료 ② 외국인이 계약 이외의 원인(상속, 경매, 합병, 신축 등)으로 소유권 취득시 : 소유권취득 일로부터 (60일/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위반시 (300만원/ 100 만원) 이하 과태료. ③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에도 대한민국 내의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 국적변경시 취득신고 : 국적변경일로부터 (3개월/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위반시 (300만원/ 100 만원) 이하 과태료. ④ 허가구역 : ()시설보호구역, ()보호구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생태경관보존지역 (허가없이 거래한 경우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원 이하의 벌금) ⑤ 외국인이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 특례상의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별도로 하여야 한다). ⑥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 특례상의 취득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도로 받아야 한다).
--------	-------------------------------------------------------------------------------------------------------------------------------------------------------------------------------------------------------------------------------------------------------------------------------------------------------------------------------------------------------------------------------------------------------------------------------------------------------------------------------------------------------------------------------------------------------------------------------------------------------------------------

정답 ① (60일) (300 만원) ② (6개월) (100 만원) ③ (6개월) (100 만원) ④ 군사시설, 문화재, 2년, 2천만. ⑤ (한 것으로 본다. ⑥ (받은 것으로 본다).

핵심문제

01.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의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특례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매매계약은 제외)을 체결 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② 외국정부나 국제기구도 외국인 특례 상의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 ③ 외국인이 계약(매매계약은 제외)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④ 외국인이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 특례에 따른 별도의 취득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
- ⑤ 외국인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으로부터 토지취득 허가를 받아야 한다.

02. 개업공인중개사가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상속으로 취득한 때에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ㄴ. 법원경매로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경락대금완납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ㄷ.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 취득의 계약은 유효하다.
- ㄹ. 외국인이 수도법상의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등의 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01.③ 02.①

[제3편] 중개실무 (총론)

실무 절차	중개계약 ⇨ 중개대상물 조사·확인 ⇨ 영업(판매)활동 ⇨ 거래계약의 체결
중개계약	① 성격 : 부동산중개계약의 성격은 민사중개계약, 낙성·불요식계약, 유상·쌍무계약, 위임과 유사한 계약이다. ② 종류 : 독점성을 기준(일반, 전속, 독점), 보수지급방식 기준(정가, 정률, 순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숫자(단독, 공동) 등으로 구별. ③ 순가중개계약의 체결, 그 자체는 (허용된다). 다만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으면 그때는 초과중개보수로 처벌된다.
중개대상물 조사·확인	① 방법 : ㉠ 공부상 검토(대장·등기부 등) + ㉡ 현장답사(유치권 등) + ㉢ 자료요구 ㉣ 공부상 검토 : ㉤ 사실관계는 (대장)을 기준으로,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 현장답사 : 지세,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등은 현장답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 자료요구 :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설명사항 :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제한·거래규제, 내·외부시설물의 상태, 벽면·도배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 조세, 거래예정가격, 중개보수
영업활동	아이다(AIDA) 원리, 셀링포인트(selling-point) 등을 활용하여 클로징(Closing)을 유도.
거래계약 의 체결	① 거래계약서 : (자유서식)으로,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한다. ② 전자계약 : 현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만이 회원 가입할 수 있다 (무등록중개업을 방지하는 효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도성 인정). ㉠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에 계약의 내용을 입력한 경우, 전자서명·날인을 하여, 전자거래계약서와 전자확인설명서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존되며, 부동산거래신고(매매)나 확정일자(임대차)가 자동부여되는 편리함이 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자동으로 보존된다).

법정 지상권	① 토지와 건물(또는 입목)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다가, 어떠한 사유로 토지와 건물(또는 입목)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건물(또는 입목)의 보존을 위하여” 건물(또는 입목)소유자에게 토지사용권(지상권)을 법률의 규정(법정)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② 민법 제366조 :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③ 민법 제305조 : 건물에 대한 전세권 설정 후, 그 지반인 토지를 처분한 경우, 토지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④ 가등기담보법 제10조, 입목법 제6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다. ⑤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유치권	① 민법 제320조(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물건을 점유하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에 따라 성립된다. 부동산 유치권의 성립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보증금이나, 권리금에 대하여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건물 공사대금채권은 유치권이 (성립한다).
분묘 기지권	① 분묘의 수호와 봉제사를 위하여, “분묘를 보존”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물권/ 채권)이다. ② 성립요건 : <봉><유> (봉분)과 (유골)이 있어야 하며, 또한 다음의 3가지 유형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 <시> 타인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설치한 후, (20년/ 10년)이상을 점유하여 시효 취득한 경우. ㉡ <승>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설치한 경우. ㉢ <자>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분묘에 대한 이장이나 철거의 특약없이 토지만 거래된 경우에 인정된다. ③ 인정범위 ㉠ 시간적 범위 : 분묘를 수호`봉제사를 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계속/ 30년 동안만) 존속된다. ㉡ 공간적 범위 :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에 한정된다/ 기지뿐만 아니라 필요한 주위의 공지까지 미친다). ④ 한계 ㉠ 봉분이 없는 “평장”이나 “암장”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 유골이 없는 “가묘”에 대해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 새로운 권능으로 “합장”이나 “쌍분”은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① 개인묘지 : 설치한 후 (30일/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허가받아야)하고, 면적은 (30㎡/ 10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가족묘지 : (사전허가/ 사후신고), 가족당1개소에 한함. 면적은(100㎡/ 1천㎡) 이하. ③ 종중(문중)묘지 : (사전허가/ 사후신고). 종중(문중)당 1개소에 한함. 면적은 (100㎡/ 1천㎡) 이하. ④ 법인묘지 : (사전허가/ 사후신고). 면적은 10만㎡ (이상). ⑤ 가족종중 법인묘지의 “1기”당 면적은 ()㎡ 이하. 합장은 ()㎡이하.

	⑥ 사설묘지 설치기간 : (30년/ 15년). (30년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 최장 60년) ⑦ 기간 만료시 (1년/ 2년)이내에 철거하여야 한다. ⑧ 매장신고 : 매장 후 (30일/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농지법	① 경자유전의 원칙 : 원칙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상한 : ㉠ 상속은 () 제곱미터 이내로 소유, ㉡ (8년/ 5년)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시 () 제곱미터 이내로 소유, ㉢ 주말·체험영농은 ()제곱미터 미만(세대원 총면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주말·체험영농은 농업경영계획서 (필요없이/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다. ④ 농지임대차 :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농지임대차 가능. (서면계약/ 구두계약)이 원칙. ㉠ (3월/ 6월) 이상 해외여행 중, ㉡ 부상으로 (3월/ 6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 질병 등 ⑤ 임대차 기간은 (3년/ 2년) 보장, 농지임차인에게 대항력 부여.
정답	<분묘기지권> ① 물권 ② ㉠ (20년) ③ ㉠ (계속) ㉡ (기존뿐만 아니라 필요한 주위의 공지까지 미친다). ④ ㉠ (인정되지 않는다) ㉡ (인정되지 않는다) ㉢ (인정되지 않는다) . // ① (30일) (신고하여야)(30㎡) ② (사전허가), (100㎡) ③ (사전허가). (1천㎡) ④ (사전허가) ⑤ (10)㎡, (15)㎡ ⑥ (30년). ⑦ (1년) ⑧ (30일) // <농지법> ② ㉠ 1만, ㉡ (8년). (1만) ㉢ (1천). ③ (필요없이), ④ 서면계약 ㉠ (3월) ㉡ (3월) ⑤ (3년)

핵심문제

03. 부동산 중개계약과 중개실무에 대한 으로 틀린 것은?

- ①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명문 규정이 있는 중개계약의 형태는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뿐이다.
- ② 순가중개계약은 부동산투기와 거래가격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형태이다.
- ③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상의 면적과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다른 경우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 ④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 ⑤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가 달라진 경우 토지소유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04. 다음 중 분묘기지권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시 판례에 따름)

- ① 분묘기지권은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관리·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물권이다.
- ② 분묘의 존속기간은 약정기한이 없는 한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또한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분묘기지권이 존속된다.
- ③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에 한하지 않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위 공지를 일부 포함한다.
- ④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⑤ 분묘기지권의 시효로 인한 취득은 2001.1.13.(장사법 시행) 이후에 점유를 개시한 분묘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05. 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② 개인묘지는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③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전체 면적은 100㎡ 이하여야 한다.
- ④ 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 관계이었던 자의 분묘를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 ⑤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06.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은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주말·체험영농을 통한 농지의 취득은 법인은 불가하며, 한 세대당 1천㎡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 ③ 농지임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 ④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다.
- 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시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절차가 폐지되었으므로, 신청인은 바로 시·구·읍·면장에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07. 다음은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제에 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이다. 옳은 것은?

- ①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 ②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한 자는 상속 당시 소유농지 중에서 1천 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다.
- ③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면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은 무효이다.
- ④ 도시민이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할 때에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는 세대원 총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⑤ 도시민이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치 않으나, 농업경영계획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03.② 04.⑤ 05.② 06.④ 07.④

[제3편] 중개실무 (각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검인제도	① <계.소.리>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계약/ 법률규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모든 물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시·군·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받은 것으로 본다). ③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받은 것으로 본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	누구든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전세권 등 물권등기/ 소유권등기에 한하여)를 할 때에 실명으로 등기를 하여야 하며,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 명의신탁을 해서는 아니된다.
유형	① 2자간 등기명의신탁(=양자간, 이전형 등기명의신탁) ㉠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 약정은 (유효/ 무효), 이전등기는 (유효/ 무효), 물권변동 (유효/ 무효) ▶ 여전히 소유권은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 ㉡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 명의수탁자가 수탁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 (해당한다/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3자간 등기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 명의신탁약정은 (유효/ 무효), 이전등기는 (유효/ 무효), 물권변동 (유효/ 무효) ▶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 등기 말소청구를 대위행사한 후, 소유권이전 청구 가능) ㉡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 명의수탁자가 수탁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 (해당한다/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 명의신탁 (위임형 명의신탁) ㉠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명의수탁자가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이다. ㉡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 무효). ㉢ 매도인이 선의의 경우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 무효), 물권변동 (유효/ 무효), 소유권은 (명의수탁자/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 ㉣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특례	* <배.중.중> 배우자(법률혼에 한함), 종중, 종교단체의 경우는 탈세·탈법·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이 (유효/ 무효)하고, 이전등기도 유효하다.
제외	*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구분소유자의 공유등기, 신탁등기는 명의신탁이 아니다.
처벌	①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 부동산평가액 () % 범위 내. ② 이행강제금 : ㉠ 1차 :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경과시 (부동산평가액의 ()%) ㉡ 2차 : 다시 1년 경과시 (부동산평가액의 ()%) ③ 벌칙 : ㉠ 명의신탁자 - ()년이하의 징역 또는 ()억원 이하의 벌금 ㉡ 명의수탁자 - ()년이하의 징역 또는 ()억 이하의 벌금.

정답 ① (계약) (소유권이전등기) ②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받은 것으로 본다). // (소유권` 전세권 등 물권등기) // ① ㉠ (무효), (무효), (무효) ▶ (명의신탁자) ㉡ (대항하지 못한다). ㉢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 (무효), (무효), (무효) ㉡ (대항하지 못한다). ㉢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 (무효). ㉢ (유효), (유효), (명의신탁자) ㉣ (해당되지 아니한다). // (유효) // ① (30) % 범위 내. // ② ㉠ (부동산평가액의 (10) %) ㉡ (부동산평가액의 (20) %) ③ ㉠ (5)년 (2)억원 ㉡ (3)년 (1)억

핵심문제

08. 다음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 ①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설정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토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설정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 ③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거래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④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⑤ 쌍무계약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09. 신탁자 甲과 수탁자 乙간 명의신탁약정을 한 뒤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수탁자가 매도인 丙(甲과 乙 사이에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모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乙의 명의로 경료된 뒤 乙이 丁과 매매계약을 체결, 丁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옳은” 것은?

- ① 수탁자 乙과 매수인 丁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丁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다면 丁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② 신탁자 甲과 乙간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은 무효이나, 乙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유효하다.
- ③ 丁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유효하나, 신탁자 甲은 丁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④ 乙의 처분행위는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된다.
- ⑤ 乙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0. 甲은 乙과 乙 소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친구 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로부터 바로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변형)

- ㄱ. 사례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 ㄴ. 丙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丙은 甲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ㄷ.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ㄹ.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

08. ④ 09. ② 10. ④

♥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다음카페) 김상진의 공인중개사법♥